

《민주화》의 진척정도에 따른 《비민주주의체제》들에 대한 부르조아적론의 반동성

한 철 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리론분야에서 반동적부르조아사상과 온갖 기회주의사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500페이지)

오늘 현대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세계의 민주화》에 대한 기만적변을 퍼뜨리면서 이른바 민주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되는 나라들에 대해 《비민주주의체제》라는 딱지를 붙이는 리론조작을 일삼으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의 자본주의적《일체화》책동을 합리화하고있다.

《비민주주의체제》들에 대하여서는 1970년대에 후안 린츠와 길레르모 오도넬을 비롯한 자본주의정치학자들에 의하여 정의된것으로서 이후의 《민주화론》자들은 이것을 정설로 삼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치적《민주화》의 정도를 평가하고 《민주화후진국》들에서의 《민주화》의 《필요성》을 력설하고있다.

《비민주주의체제》들에 대한 론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정책을 리론적으로 변호하고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길로 나아가는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외정책을 합리화하면서 이 나라들의 정치체제를 서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추구한 리론적조작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린츠와 오도넬은 《비민주주의》의 부류에 속하는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해서는 《전체주의체제》라는 개념으로 모독하면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파썸정치와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권위주의체제》라는 개념으로 진보적인 길로 나아가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정치를 헐뜯고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의 괴뢰정권들에 대해 《온건한 권위주의》, 《개발독재형권위주의》 등의 감투를 씌워 변호하는 리론적추태를 보였다.

후안 린츠는 《전체주의체제》(Totalitarian Regime)로서의 사회주의나라들의 정치적특성을 지난날의 파썸독재국가들과 동일시하면서 악랄하게 비방하였으며 에스빠냐의 프랑꼬 독재체제를 실례로 제시하면서 《전체주의체제》도 아니며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와도 다른 《비민주주의체제》로서의 《권위주의체제(Authoritarian Regime)》라는 개념을 제창하였다. 그에 의하면 《권위주의체제》에서는 《정치적인 다원주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한된 다원주의》에 불과하다. 《권위주의체제》는 《전체주의에 있어서 보이는것과 같은 매우 정밀한 지표로 되는 이데올로기는 가지지 않으며(다만 그 발전의 어떤 시기를 내놓고는) 대중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동원》도 없다. 그러나 《지도자(어떤 경우에는 소수의 집단)는 형식적으로는 묘연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예측가능한 일정한 범위내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때문에 여기서는 《민주주의체제》에 비하면 제한된 정치적경쟁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오도넬은 1960년대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등장하여 존재한 군사정권을 《관료주

의적권위주의(Bureaucratic-Authoritarianism)체제》로 이름지었다. 오도넬은 먼저 《현대화》의 지표를 제시하고 그 정도에 따라 《권위주의체제》나 《민주주의체제》가 채용되든가 혹은 《전체주의체제》가 선택된다고 논하고있다.

그는 《사회경제적인 발전이 정치적인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가정밑에 해당 나라들의 공업화의 추진, 국민총생산액과 무역액, 도시인구와 노동인구수의 증대, 생산력의 제고와 노동조합, 교육, 출판 등의 발전이라는 지표에 의하여 《현대화》의 정도를 측정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의 결과에 의하면 《현대화》의 수준이 낮은 나라들에서 《권위주의체제》가 채용될 경향이 있다고 한다.

린츠와 오도넬의 《비민주주의체제》들에 대한 분류와 해석은 자본주의어용학자들에 의하여 일반리론과는 다른 《현실정치의 분석》으로 찬미되었으나 본질에 있어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을 기준으로 실증주의적립장에서 다른 나라들의 정치실패를 외곡설명한 궤변에 지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다양성》을 떠들면서 《비민주주의체제》들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 론의는 이 시기 《정치발전론》의 허구성이 폭로된것과 관련하여 자본주의비교정치학계에서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 나온것이였으며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전면적으로 전개된 《민주화론》에 이론적전제를 제공한것으로 되었다.

《민주화》의 진척정도에 따른 《비민주주의체제》들에 대한 론의는 본질에 있어서 서방식자본주의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정치방식을 헐뜯는 반동적론의이다.

《민주화》의 정도는 《민주화론》의 제창자들이 그 무슨 《현대화》, 《민주화》의 지표로 설정한 기준에 의하여 순수 객관적으로만 규정되는것이 아니며 해당 나라 정치의 성격과 사회력사적특성을 떠나 제멋대로 평가될 문제도 아니다.

해당 나라의 민주화의 정도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정도를 놓고 평가되고 규정되어야 한다. 민주화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어 실시하는 정치체제와 질서를 사회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구현하는것이며 이것은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것을 주요한 전제로 한다.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은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로 모든 국가기구들을 조직하고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세우고 관철해나갈수 있는 정치제도를 확립하고 운영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자기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작성하고 그것을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기의 힘으로 관철해나갈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룬다.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정치의 주인, 정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여가는 과정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 정도에 따라 그 나라의 민주화가 평가되여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나라의 민주화의 정도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해당 나라 인민대중자신이 평가하고 규정할 문제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고 《민주화후진국》의 오명을 씌우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제국주의적론리는 용납될수 없는 반동적궤변에 불과하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모든 정책이 작성되고 관철되며 인민의 정치가 실시

되어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때 그 나라는 민주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민주주의체제》들에 관한 논의는 시종 서방자본주의체제를 미화분식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멸등시하고 멸시하는 서방중심적인 사고로 일관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정책을 이론적으로 변호하는 반동론조이다.

《민주화》의 진척정도에 따른 《비민주주의체제》에 관한 논의의 반동성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악랄하게 헐뜯기 위하여 조작된 황당무제한 꾀변이라는 데 있다.

현대자본주의《민주화론》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적반대세력과 정치적경쟁의 존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전체주의》로 꾀방하고 《민주화의 필연성》을 설교하고있지만 이것은 정치의 본질과 정치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문제에 대한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관점으로부터 출발한 황당무제한 꾀변에 불과하다.

현대자본주의《민주화론》이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체제를 《전체주의체제》로 꾀방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와 파쑈독재체제를 결부시키려는 기만적허구이다.

《민주화론》의 제창자들이 지난 시기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들쭉춘 파쑈독재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나란히 놓고 그 무슨 《전체주의체제》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하는것은 사람들의 의식속에 잠재하는 극악한 파쑈독재의 영상을 악용하여 사회주의를 모독하려는 비렬하고 악랄한 모략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일원주의》에 기초한 정치에서의 《일당독재》라고 헐뜯어왔다.

제국주의반동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러한 꾀방이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 의해 되돌려세우려는 저들의 반동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는 그 성격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와 부르조아독재로 특징지어진다. 바로 썩어빠진 자본주의가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파쑈적전체주의체제를 낳고 자래웠음을 역사는 기록하고있다.

제국주의어용매문가들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에 대한 꾀방은 사회주의정치의 생명인 노동계급의 당의 유일적령도와 사회주의적집단경리, 사회주의사상의 유일적지배를 헐뜯어 자본주의복귀의 전체조건을 조성하려는 용납될 수 없는 반동적론의이다.

한줌도 못되는 반동통치계급의 탐욕적리익을 위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무참히 희생시키는 파쑈적전체주의는 절대로 사회주의와 랑립될 수 없는 부르조아독재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류력사에 존재한 모든 착취사회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사회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 사회로서 정치방식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사회주의정치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정치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하여 정책화하고 인민대중자신의 힘에 의하여 관철해나가는 참으로 인민적인 정치이다.

이처럼 사회주의를 《전체주의체제》로 외곡하는 《민주화론》은 자본주의가 낳은 필연적산물인 파쑈적전체주의의 본질을 가리우고 사회주의를 꾀방하여 자본주의복귀의 길로

유도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음흉한 목적을 대변하는 반동리론에 불과하다.

《민주화》의 진척정도에 따른 《비민주주의체제》에 관한 논의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발전도상나라들을 서방식자본주의화하며 저들의 괴뢰정권들을 비호하기 위하여 조작된 리론적협잡이라는데 있다.

《민주화론》에서는 《비민주주의체제》로서 《전체주의》와 함께 《권위주의》라는 개념으로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진보적인 나라들의 정치를 헐뜯고 다른 편으로는 《온건한 권위주의》니 《개발독재형권위주의》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과 같은 괴뢰정권들을 비호한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자기의 정치제도와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해당 나라가 어떤 정치제도와 방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것은 그 나라 인민들이 결정할 일이며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삿대질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마다 력사발전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주민구성 및 사회문화적요소의 다양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들에 따라 정치제도와 방식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의것만을 다른 나라들에 내리먹이려 한다면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불피코 대립과 불화가 조성되고 국제무대에서 국가자주권존중의 리념에 기초한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관계가 수립될수 없게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치체제를 확립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로 나아가는데 대하여 《권위주의체제》니 뭐니 하면서 민주주의와 대치시켜 론하는것은 저들의 신식민주의적지배체제가 붕괴되는데 대한 제국주의반동들의 우려와 뒤뜰어진 심리를 반영한 꾀변에 불과하다.

더우기 《민주화론》에서 남조선과 같은 제국주의의 식민지괴뢰국가들에 수립된 반인민적독재체제를 놓고 마치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듯이 묘사하는것은 이 나라들에서의 반인민적독재실현을 변호해나서는 과렴치하고 뻔뻔스러운 론리이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의 배를 불리워주고 인민생활을 극도로 령락시키는 반동통치를 두고 《현대화》요 뭐요 하면서 《민주화》에로의 도상에서 있을수 있는 《유교권위주의》니 《온건한 권위주의》니 하며 미화분식하는것은 《민주화론》자들이 제국주의의 어용매문가들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반인민적인 서방식《자유민주주의》를 마치도 진정한 민주주의인듯이 설교하면서 그것을 모방하는것을 《정치발전》과 《민주화》의 목표로 제시하는 현대자본주의《민주화론》은 다른 나라와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과렴치한 강권행사를 변호하고 세계의 자본주의적《일체화》에 리론적근거를 부여하려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꾀변에 불과하다.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지배책동을 변호하는 반동사상리론들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실마리어 《민주화》, 《비민주주의체제》